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469
----------	------

발의연월일 : 2020. 10. 8.

발 의 자 : 이용빈 · 고영인 · 민형배  
송영길 · 윤준병 · 이상현  
이용선 · 이탄희 · 장경태  
조오섭 · 한병도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사업자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관련 허가 등을 신청하기 위하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의 초안을 공람하게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의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관련 정책 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가 설명회, 현장점검 등 ‘의견수렴’ 정도의 소극적 방식에 그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맥스터(조밀건식저장시설) 증설 결과를 발표할 당시에는 찬반을 두고 지역간 격렬한 분쟁이 발생한 바 있음.

하지만 일본, 영국 등의 경우에는 기획단계부터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적 공론화 절차를 단계별로

실행하여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고 있음.

이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 계획서는 초안의 공개와 공청회 등의 개최를 통한 주민의견 반영을 의무화하고, 준비단계부터 관련 민간기관을 지정하여 주민의견수렴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운영 관련 주민참여의 개방성,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3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하게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온라인 정보공개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제공을 통하여 공람하게 하여야 하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해체계획서 초안을 공람하게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를 “해체계획서 초안을 온라인 정보공개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제공을 통하여 공람하게 하여야 하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청회 등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을 주민의견수렴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3조(주민의 의견수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자”라 한다)는 제10조제2항·제5항, 제20조제2항 또는 제63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제3항에 따른 <u>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하게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u>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u>이 경우 주민의견수렴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u>	제103조(주민의 의견수렴) ① --- ----- ----- ----- ----- ----- <u>---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온라인 정보공개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제공을 통하여 공람하게 하여야 하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u> ----- ----- ----- ----- ----- <u>삭제&gt;</u>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2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28조제2항에 규정한 해체계획서를 작성할 때 제3항에 따른 <u>해체계획서</u>	② ----- ----- ----- ----- ----- <u>해체계획서</u>

